【 주간이슈 】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방지 방안

이기형 산업연구실장

이상우 선임연구원

- 강력범죄 피의자 K씨의 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이 잘못 사용되면 개인과 이웃, 사회에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선택과 보험사기의 방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K씨의 사례조사 결과 보험사고 직전에 보험에 가입한 역선택 문제, 중복 및 다중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사실 인지 부족, 보험사기 정보시스템 활용 미흡, 전문적인 보험사기 법률 미비로 위법행위 입증 곤란, 보험사기 처벌 근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향후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한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첫째, 미국 및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보험관련 법률에서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기관별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복 계약 또는 다중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계약 심사 또는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와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모집종사자들의 교육 강화 필요
 - 넷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첩보 교환 및 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감독당국 및 경찰, 보험업계 상호간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다섯째, 최근 권역을 초월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 등 업무 협조 체계 강화 필요

※ 본 내용은 보험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1. 서론

- 최근 나라 안에 큰 충격과 슬픔을 준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K씨의 사례는 보험 계약을 악용할 경우 개인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의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함.
 - 보험계약은 동질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각출하여 약정한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해당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원상을 회복하도록 해주 것이 기본 원리임.
 - 그러나 동 사건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역선택을 통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개인의 금전적 욕구만을 충족하는 보험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당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선량한 개인이나 심지어 친족까지 살해하는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보험사기를 “희생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조용한 대재앙(quiet catastrophe)”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유형을 보면 “희생자가 있는 범죄”의 양상으로 나타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따라 K씨의 사례를 통해 역선택 사례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하여 제2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역선택과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여 보험의 본래 역할인 사회전반의 근심과 걱정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보험사기의 적발 현황

- 2007년 보험사기의 적발금액은 2,045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2,410억원 규모¹⁾가 될 것으로 추정됨.

1) 서울신문. 2009.2.5

- 200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1,652억원으로 전체의 80.8%를 점유하며, 생명보험은 393억원으로 19.2%를 차지
- 또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전년에 비해 15.6% 증가한 3만 922명이나 되며 이중 손해보험의 사기 혐의자가 전체의 92.5%를 점유함.

<표 3>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2005	2006(a)	2007(b)	증감율(b/a)
적발 금액	생 보	24,030	37,349	39,335	5.3
	손 보	110,986	140,733	165,189	17.4
	계	135,016	178,082	204,524	14.9
혐의자	생 보	1,118	2,490	2,309	△7.3
	손 보	18,156	24,264	28,613	17.9
	계	19,274	26,754	30,922	15.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8. 9. 1

- 2007년의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면, 자동차보험이 66.4%(1,359억원)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15.2%(310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4%(233억원) 순으로 높음.
 - 보험사기 혐의자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이 80.3%(24,825명)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0%(3,387명),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5.6% (1,742명) 순으로 높음.
- 보험사기 혐의자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40대가 29.2%(9,024명), 30대가 28.3%(8,750명), 20대가 20.1%(6,230명), 50대가 15.6%(4,816명) 순으로 높음.
 - 특히, 10대의 경우 1.9%(578명)로 점유비는 낮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83.5%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음.
 - 10대의 보험사기 증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보험사기 조직 등 성인들이 청소년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계약자나 수익자가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사기를 일으키는 경성사기(hard fraud)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의사고나 허위사고, 사후가입, 차량도난,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경성사기는 적발 금액 기준으로 2005년의 경우 74.1%였으나 2006년에 75.0%, 2007년에는 77.8%로 증가했음.
- 경성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인 동질위험을 훼손하여 선량한 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인명사상과 타인의 재산피해, 이로 인한 가족의 붕괴 초래 등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4> 보험사기 적발 유형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상반기)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경성사기	고의사고	25,770	19.1	33,421	18.7	35,933	17.6	21,402	19.6
	허위사고	26,414	19.6	39,073	21.9	50,506	24.7	26,433	24.2
	사후가입	13,927	10.3	20,573	11.6	32,149	15.7	13,081	12.0
	차량도난	3,279	2.4	2,841	1.6	2,927	1.4	928	0.8
	바꿔치기	30,661	22.7	37,590	21.1	37,575	18.4	21,424	19.6
연성사기	피해과장	20,131	14.9	35,724	20.1	31,953	15.6	17,808	16.3
	기 타	14,833	11.0	8,862	5.0	13,481	6.6	8,188	7.5
합 계	135,016	100	178,082	100	204,524	100	109,264	100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8. 9. 1

3. 역선택 사례를 통해 본 보험사기성 계약의 원인과 문제점

가. 역선택 보험계약의 발생원인

- 최근 피의자 K씨의 사건이 DNA분석 등 첨단 과학수사기법에 의해 밝혀지면서 역선택 등 사기성 계약의 예방 및 적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K씨는 단독으로 1998년부터 총 30여개 보험에 가입하여 5개의 보험사고 건으로 총

6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일반인 경우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드문 사례임.

- 또한 K씨는 평상시에도 “보험 한방이면 된다”는 표현을 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실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증거 소실 등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기성 보험금 청구와 고의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최근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K씨의 보험사기성 계약과 보험금 청구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① 1998-1999년 트럭 화재로 9천만원 보험금 지급 사례

- 1998년에 K씨가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서 2차례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1999년에는 불이 난 덤프트럭을 도난당했다고 하여 5,700만원 보험금을 지급 받음.
- 이 경우 처음의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된 경우에 보다 세심한 조사와 증거 확보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여 짐.

② 2000년 1월 점포의 화재사고 사례

-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순대국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
- 이 경우 화재보험계약을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35일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짐.

③ 2000년 10월 자동차 전복사고 사례

- K씨는 자신의 소형차가 전복된 사고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5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음.
- 병원에서 최초 K씨에게 2주정도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로 1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140일간의 입원한 것으로 하여 5,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 경우도 자동차사고 발생하기 한달 전에 20건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경우 보험산업내 보험종목간 불량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유되지

못하여 사전에 역선택 등을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며,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기초하지 아니한 입원 증명서 발급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

④ 2005년 장모집 화재사고 : 4억 8천만원 보험금 지급 사례

- K씨와 부인이 장모집에서 아들과 같이 잠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장모와 아내는 스스로 질식사하고 자신과 아들은 탈출하여 아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부터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
- 이 사건에 있어서 보험은 장모집 화재사고 이전 2주전에 평일 재해사망인 경우 5,000만원을 보상하나 주말 재해 사망의 경우 평일의 두 배를 보상하는 특약이 부가된 보험상품을 K씨가 가입하고 1회 보험료 5만원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았음.
 - 또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3개 보험회사에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계약을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사고로 인한 아내의 사망으로 3억 3,00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밝혀짐.
- 이 경우 첫째,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화재사고 직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인수시 중복 보험가입 및 보험금 다중 지급 경력에 대한 조사가 적절히 이행되지 못하는 등 보험사기계약의 개연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음.
- 둘째,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했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나. 보험사기의 발생 조건

- 보험사기의 발생 유발 원인에 대해 국제보험감독관협회(IAIS)²⁾는 보험사기 삼각구도(Fraud Triangle)에 대한 대책이 부족할수록 보험사기성 계약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음.
- 즉,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동기와 유인(motive, incentive)’이 있는 사회 환경에서 보험회사와 규제·감독당국의 내부통제 및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사기가 유발될 ‘기회요인(opportunity)’과 사기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 합리화

2) IAIS, *Report on Insurance Core Principles Self-Assessment Exercise 2004/2005*, p.7, 2006.2

(rationalism)'가 가능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큼

<표 5> 국내외 보험사기 유발요인 분석

유발 요인	국내사기	해외사기	요 인
동기·유인 (motive/incentive)	제어가능	제어가능	경제적 곤란, 고액급부설계
기회요인 제공 (opportunity)	기반구축으로 제어 가능	제어곤란, 제어수준 도 국가별로 상이	사기법규 미비, 적발시스 템부재, 적발조직 부재
결과의 합리화 (rationalism)	제어 가능하나 어려 움 존재	인과관계 입증 곤란 으로 제어곤란	상품설계상 오류,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 인식

- 피의자 K씨는 보험사기의 유발 요인에 대한 대책의 미비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삼각구도를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음.
- **동기와 유인의 측면:** 대부분의 보험사기 유발자는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 하거나 위법을 통해 보험금을 부적절하게 취득하기 때문에 유발자가 처해진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음.
 - 그러나, 규제·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의 보험가입 제한이나 보험상품의 고액 설계 억제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부분임.
- **기회요인의 측면:** 미국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기에 관한 법규, 적발 시스템, 보험사기 전담조직 등이 오랜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인 법규가 미비하며, 적발 시스템 및 전담조직 등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됨.
- **결과의 합리화 측면:** 국내사기는 국내에 유발자와 관련 자료가 국내에 있고 법 적용도 용이하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하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사기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확보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거하기 곤란함.

다. 보험사기 방지 체제의 문제점

- **형법에서 사기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에 대한 전문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험사기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의거 최대 1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처벌 받는 것은 많지 않은 상태임.
 - 2003년부터 2007년 9월까지 보험사기로 처벌한 판례 494건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가 46.9%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은 28.4%로 나타나 보험사기자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³⁾
 - 이와 같이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은 보험사기성 계약 또는 보험금청구라는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나,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사용제한 등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
- **역선택 예방을 위한 상품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중복 보험계약 및 보험금 다중 지급에 대한 사전에 인지가 미흡하였음.**
- 보험계약이 사행성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가격자유화 이후 상품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상품을 개발하거나 고액 급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였음.
 - 이러한 계약이 많이 있을수록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역선택 등에 의한 사기성계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보험상품 경쟁을 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노출된 위험 상황이나 요구되는 리스크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이번 사건의 경우 K씨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 경력이 많으며 직업 및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특징이 있음.
-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생명 및 손해보험의 계약 정보를 통합한 DB구축이 미진하여 역선택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보험사기를 일으키고 싶어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기 개연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를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하나 부분적인 활용에 머물러 있음.
 -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액 다수 보험계약을 일시에 가입하는 경우 사기성

3) 헤럴드경제(2009.2.3)

계약일 가능성이 높지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계약 정보를 통합한 계약 및 사기정보DB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험금 청구 건에서도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사기 혐의 관련 첩보 및 정보교환을 위해 보험산업과 사법당국간의 전문적 채널이 부재하여 보험사기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현재 보험사기 등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9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운영 중이나 사법당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보험회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당국과의 공조가 불가피 하나 수사기관 내 보험사기 전담조직이 부재하여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위한 공식적인 채널과 절차가 부재하므로 사법당국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첩보 및 정보 교환을 통한 보험사기 억제 미흡한 실정임.

□ **민영보험과 유사보험간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가 부재하여 보험사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유사보험(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의 경우 사실상 보험이지만 감독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공유 등의 업무 협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보험사기 의도자들은 유사보험과 보험을 넘나들며 사기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기 적발 활동에 제약이 됨.
- 보험회사들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의도자들이 보험사기 방지 활동이 취약한 유사보험기관으로 이동하는 문제 발생되고 있음.

4.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억제 방안

-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사기 행위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명확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범죄는 무고한 인명이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고 한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강도사건이나 절도사건에 비해 매우 심각한 파급효과가 있음.
 -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취득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여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범죄의 공모정도, 주도적 역할 등의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영국은 고질적인 사기문제 해결과 사기행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의 유인이 된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법을 통합한 사기법(The Fraud Act 2006)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영국의 사기법은 사기행위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사기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기행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기행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거법으로 정립됨.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금 사기를 중죄로 규정하거나, 또는 주에 따라 사기금액의 규모에 따라 벌칙을 단계화함.
 - 독일의 경우 보험사기죄의 실행 착수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보험남용죄를 규정함.
-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일원화하거나 시스템 운영 주체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기관별 보험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과거 보험금지급사실, 현재 보험가입현황, 사고피해자 정보 등의 보험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부합한 보험상품 권유를 위하여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된 보험이외의 정보들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사기 관련업무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ISO(Insurance Service Organization)가 보험정보, 의료정보, 자동차 차대번호, 조세정보, 경찰조사 정보 등을 Claim Search DB에 통합 구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동 DB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업무에 수행하고 있음.

- **보험계약 인수와 지급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모집종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 인수단계에서 다수 및 중복보험계약의 가입에 대한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역선택 방지와 계약자의 직업 및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보험상품의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이 필요함.**
 - 보험사기 첩보 및 정보 입수·교환 등의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현행 금융위, 금감원, 보험유관기관 이외에 경찰청 등 사법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보험조사협의회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등에서는 보험사기를 공공범죄로 인식하고, 사법당국이 보험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사법당국과 보험감독기구 및 보험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90년대초 경찰청의 제안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경찰·업계 협의체가 창설되어 정기 또는 수시적인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 중임.

- **권역을 초월한 보험사기 확산에 대비하여 민영보험과 유사보험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함.**
 - 민영 보험회사와 유사보험 사업자간의 보험사기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각 유사보험 업무 근거법률에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유사보험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일본의 경우 생명 및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기관과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조회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음.